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음 12월 1일) 제19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혁신도시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효성 UP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일 시행
올해 18% 이상 의무채용 2022년 30%까지 확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후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늘려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실현되면 혁신도시가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 대학들도 이전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 극복과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김 시장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법제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대표적으로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논의도 이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그동안 청년일자리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지역이슈를 전국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해 국가균형발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를 세계 품에… 중장기적 문화정책 추진

시,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문화예술 도시브랜드 강화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 등
분야별 6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중장기 문화정책으로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년브리핑에서 '천년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농업 분야의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브랜드 강화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도시 전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 조성 △선진 체육행정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강화 △역량 있는 농촌경제 실현, 지역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전주푸드 정착이다.

첫째 시는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 문화비전과 목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방안 등 중장기 문화정책 마스터플랜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해 문화 행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 △지붕없는 공연장·미술관 확대 추진 △시민문학제·생활 속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문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닦기로 했다.

둘째 시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과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전통한지 판로지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명품김치 산업화 등 한문화산업의 대중화·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의 경우 시는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사업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세계무형유산 전주포럼과 전주문화재 야행, 시민주도형 미래유산 지정·보존 등을 통해 유형의 유산은 물론 무형유산과 미래유산을 발굴·보전·계승하기로 했다.

넷째 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 콘텐츠와 문화시설 기능 보강, 가로환경 정비 강화 등을 통해 명품 한옥마을을 세계인들이 생전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해야 할 국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섯째 시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시는 스포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국제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섯째 시는 전주푸드 정착과 농민이 행복한 농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 체계화와 마을·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생산을 유도해 전주푸드 기획생산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여단체 대표들이 서명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이뤄내자'

도, 유관기관·시민단체와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식
지방분권 국가 선언·지방정부 위상 확립 등 개헌 촉구

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식을 했다.

서명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도의회 정호영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 이다.

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하여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농업인들 소득 올리기 앞장

31억 투입 농업 신기술 보급 등 추진

전주시가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화작목 재배법 등 농업기술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기후변화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전주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총 31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보급사업과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농업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업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지역 농업인들이 특화작목을 재배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농업기술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을 돕기 위해 농업 신기술보급을 위한 9개 시범사업에 총 7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개 사업에 총 8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 7개 사업에는 10억3000만원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9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고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2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도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지역 농업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전주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단체로 해당 분야별 신청기준에 맞게 각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간 내에 농업기술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조한춘 소장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지원사업으로 전주시에 맞는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6차산업화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농업기술보급사업과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nongup.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706~6714)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